

2023.12.5.(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정진국 선임비서관(진성준 의원실) 010-9687-1812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2023년 12월 5일 (화) 13: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한 기본권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3% 내외에 불과합니다.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프리랜서를 비롯한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술한 차별과 불이익 처우에도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겹게 견뎌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현실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립돼 운영된 전국의 노동센터들은 취약노동계층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돌봄, 플랫폼, 청년 등 노조 바깥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이해 대변을 위해 힘써왔고, 상당한 성과도 이뤘습니다. 또한 기댈 곳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막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북, 충북, 강원 지역에는 노동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정규직 지원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성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은 대다수 취약노동계층 당사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노동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익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관련 업무는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터’에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센터 전국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5일 (화)

**더불어민주당 올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첨부 1]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참고자료]

<진행>

사회 : 이용빈 국회의원

인사말 및 발언 :

- 1) 기자회견 소개 및 취지 설명 (전혜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 2) 법안 통과 필요성 설명 (진성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임 을지로위원장)

3) 각 민생단체 발언

- 김남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 홍복근 아파트경비노동자
- 장수용 마니또 집행위원

4) 기자회견문 낭독

-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첨부 1]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12. 4.

발 의 자 : 진성준 · 박 정 · 우원식
김정호 · 양경숙 · 허숙정
김성주 · 박주민 · 이용빈
송옥주 · 윤영덕 · 조오섭
박영순 · 장경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보수,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참고로, 2003년 울산 복구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법률상담, 취업알선, 인권교육 등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2014년 서울시는 20개 구에 있는 노동자복지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어 12개 시·도에

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립하였음.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5.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① 비정규직 근로자

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와 권익에 관한 조사·연구·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와 공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공제회, 단체 등의
조직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 관련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정규직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과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3.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

4.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단체나 지방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

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법률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의 기본계획과 제7조의 지원계획에 포함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권역별·자치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7.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단체나 지방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근로조사관) ①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